



하류 노인 (下流老人)

▪ Analyst 나미션 misun.na@daishin.com

2026년 대한민국, 문득 10여 년 전 이웃 나라 일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고령화, 저성장, 소비 방식의 변화, 그리고 일과 삶의 재편
지금 우리가 마주한 질문들은 사실 일본이 2010년대에 먼저 겪었던 고민들이기도 합니다.

[도쿄 타임머신]은 2010년대 일본 사회를 관통한 신조어와 유행어를 따라 두 번째 여정을 시작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무엇에 반응했고, 어떤 가치관이 일상을 바꾸었으며, 그 변화는 소비와 산업의 구조를 어떻게 재편했을까요?

가볍게 떠나는 시간 여행 속에서 문득 깨닫는 투자 아이디어 한 조각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17번째 주제는 중산층의 몰락이 가져온 노후 파산의 경고등, 하류노인(下流老人)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여행](#) [#2010s](#) [#신조어로읽는사회](#) [#투자아이디어](#) [#하류노인](#) [#下流老人](#) (2015년 日 올해의 유행어 후보)

2015년의 경고, 하류노인(下流老人)

평범한 중산층도 노후에 무너질 수 있다

2015년 일본 사회에는 '하류노인(下流老人)'이라는 다소 충격적인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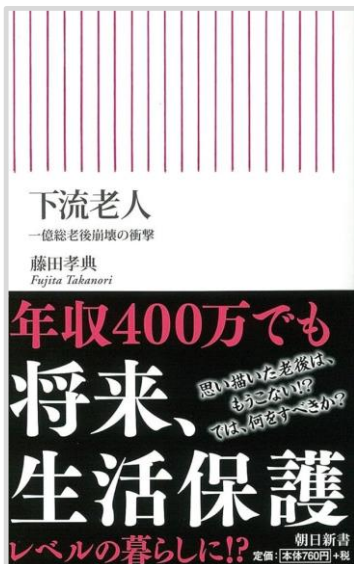
사회복지사 출신의 후지타 다카노리가 펴낸 『하류노인』은 출간 후 큰 반향을 일으켰고, 같은 해 일본 신조어·유행어 대상 TOP10에 선정될 정도로 '하류노인'은 사회적 화두가 되었습니다.

저자는 NPO 활동 현장에서 마주한 고령자 빈곤 문제를 바탕으로, 노후 빈곤이 더 이상 일부 취약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내 집 한 채를 마련했던 평범한 중산층조차 은퇴 이후 빈곤층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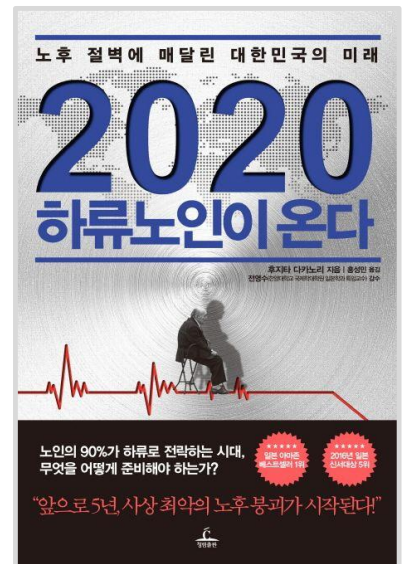
후지타씨는 하류노인을 단순히 소득이 낮은 노인이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 삶에 대한 의욕 상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상태로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특정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수로 인한 생활비 부담, 늘어나는 의료·간병비, 충분하지 않은 연금, 성인 자녀 부양 문제까지 여러 위험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일본 사회는 "노후에도 중산층이 무너질 수 있다"는 현실을 체감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불안은 특정 세대를 넘어 사회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하류노인 (후지타 다카노리 지음, 2015)



하류노인 번역본 (2016)



누구나 '하류노인' 이 될 수 있다

노후를 무너뜨리는 여섯(6) 가지 리스크

하류노인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사건이라기 보다, 여러 위험이 겹치면서 평범한 중산층의 노후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 첫째: **질병과 간병** (본인이나 배우자가 중증 질환을 겪게 되면 의료비와 간병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
 - 둘째: **장수 리스크**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자산 고갈 속도가 실제 생존 기간을 따라잡지 못하게 됨)
 - 셋째: **비정규직 확대** (장기간 비정규직으로 일한 경우, 연금 수급액이 부족해 은퇴 후 소득 기반 약화)
 - 넷째: **8050 문제**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50대 자녀를 80대 부모가 연금으로 부양하다 파산)
 - 다섯째: **황혼이혼** (재산 분할과 생활비 증가로 인해 은퇴 이후 생활 수준이 급격히 낮아질 수 있음)
 - 여섯째: **치매와 인지기능 저하** (재산관리 능력이 약화되면서 금융사기나 자산 동결 위험에 노출)
- 이처럼 하류노인은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노후 리스크가 겹쳐 만들어진 초고령사회의 새로운 사회문제였습니다.



자료: Google 이미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일본 사회를 뒤흔든 연쇄 경고음

무연사회(2010) → 노후파산(2014) → 하류노인(2015)

『하류노인』이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일본 사회가 이미 여러 차례 노후와 관련된 경고 신호를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0년 NHK가 방영한 [무연사회, 無縁社會]는 가족, 친척, 이웃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결국 고독사에 이르는 현실을 조명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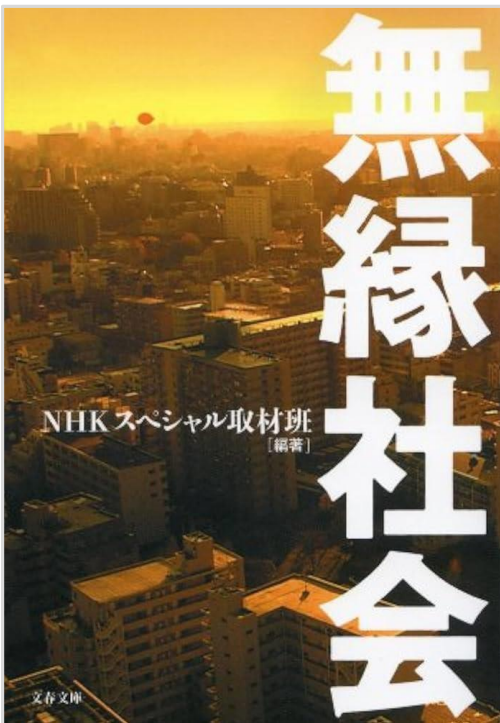
2014년 NHK 스페셜 [노후파산]은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노인이 생활비와 의료비 부담 속에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가혹한 현실을 보여주며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리고 2015년, 『하류노인』이 출간되면서 노후 빈곤은 더 이상 일부 취약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사회 구조적 위험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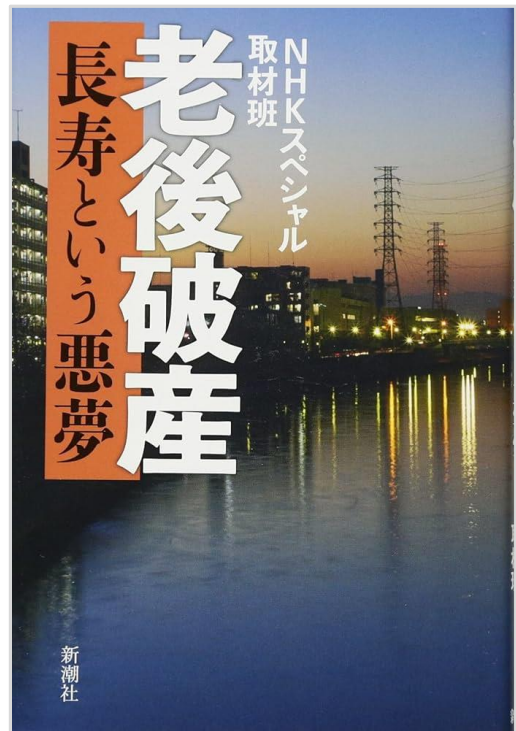
무연사회가 관계의 단절을 보여주었다면, 노후파산은 경제적 붕괴를 드러냈고, 하류노인은 이 두 문제가 서로 맞물려 노후의 삶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일본 사회는 이러한 연쇄적인 경고음을 거치면서 오래 사는 것보다 노후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더욱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NHK 스페셜 [무연사회] (2010년)



NHK [노후파산, 장수라는 악몽] (2014년)



자료: Google 이미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하류노인'을 막기 위해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나

'은퇴 연장'으로 노후 빈곤을 늦추다

사실 일본 정부는 하류노인 담론이 등장하기 전부터 고령화와 연금 재정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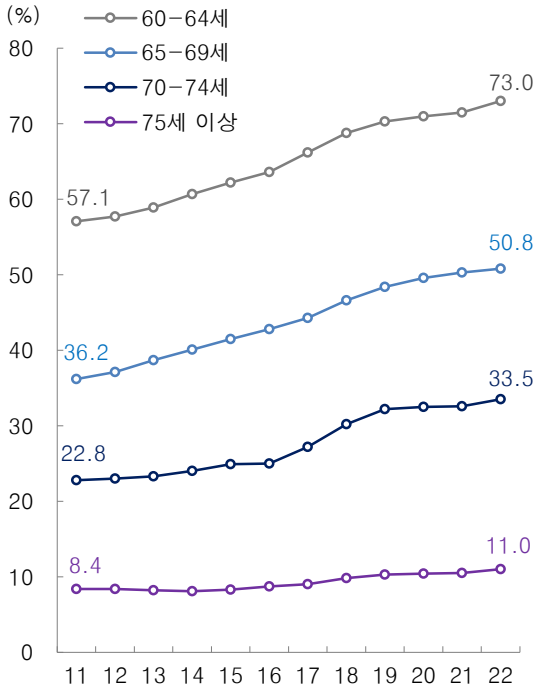
평균수명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은퇴 시점이 그대로라면 노후 소득 공백 역시 커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일본은 2000년대 이후 정년 연장과 계속고용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며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해 왔습니다. 특히 2013년 개정된 고령자고용안정법에서는 희망하는 근로자에게 65세까지 일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기업에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후에도 고령층 빈곤 문제와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자, 2021년 시행된 추가 개정에서는 기업이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여하며 정책 범위를 더욱 확대했습니다.

결과, 일본의 65~69세 취업률은 50%를 웃도는 수준까지 상승했고, 노후 빈곤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일본 사회는 연금에만 의존하기보다 더 오래 일하며 노동소득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노후 대비 전략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日 고령자 연령별 취업률 추이



현역으로 일하는 일본 시니어들



자료: 총무성, Google 이미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복지 시스템도 바뀌었다

살던 곳에서 나이 들기 (Aging in Place, AIP)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일본 정부는 연금이나 현금 지원만으로는 노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의료비와 간병비 증가는 국가 재정과 개인 자산을 동시에 압박했고, 병원과 대규모 시설에 의존하는 기존 복지 체계도 점차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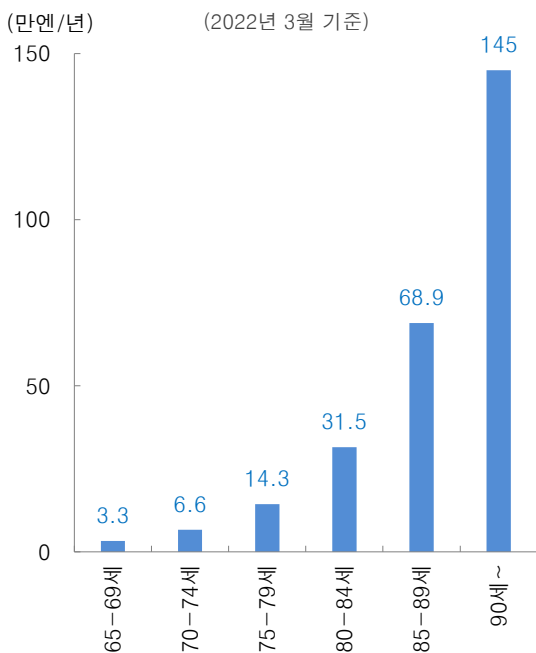
이 과정에서 일본이 주목한 개념이 바로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AIP), 즉 살던 곳에서 계속 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핵심은 고령자가 시설이나 병원으로 이동하기보다 자신이 살아온 집과 익숙한 지역사회 안에서 의료·간병·생활지원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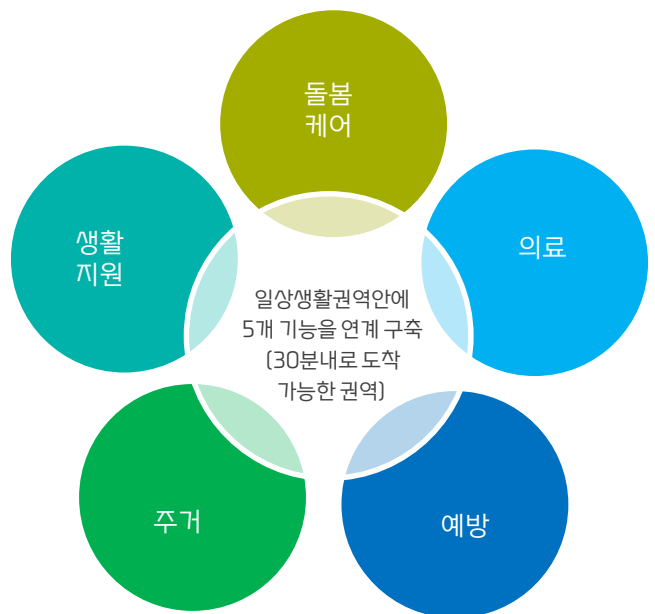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2010년대 들어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정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의료, 돌봄, 주거, 예방, 생활지원 서비스를 지역 단위에서 유기적으로 연결해 고령자가 가능한 한 오랫동안 지역사회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정부는 2025년(1차 베이비붐 세대가 모두 75세 이상이 되는 시점)을 목표로 전국적인 구축을 추진했고, 현재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일본 고령자 정책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 고령자 연령별 1인당 간병서비스 이용비



☞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자료: 후생노동성,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하류노인'을 막기 위해 금융권도 나섰다

노후 리스크에 대응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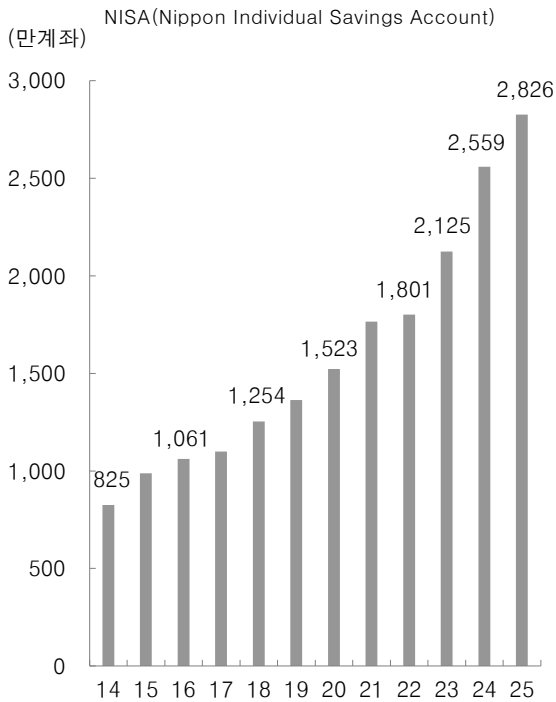
고령화가 심화되고 노후 빈곤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커지면서 금융권 역시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과거 금융기관의 역할이 자산을 늘리는 데 집중했다면, 초고령사회에서는 고령자의 재산을 오래 유지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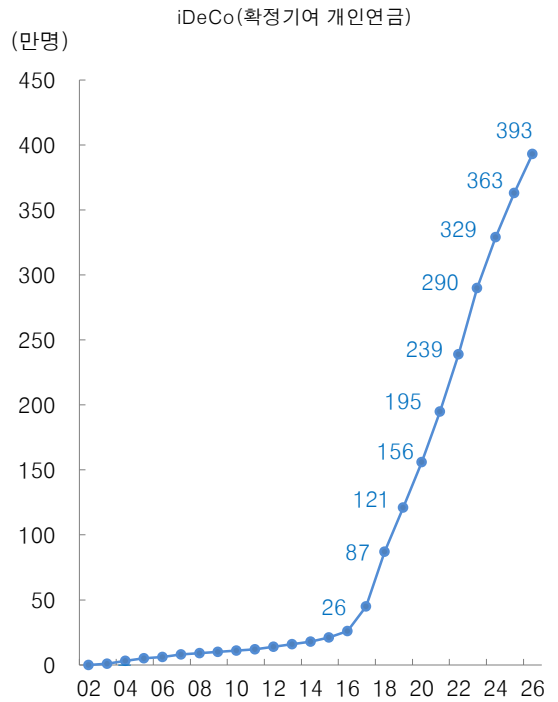
이에 은행들은 자산승계와 가족신탁 등 신탁 서비스를 확대했고, 보험업계는 장수 리스크와 간병 비용에 대비한 상품 개발에 나섰습니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도 NISA(일본판 ISA)와 iDeCo(일본판 IRP) 같은 장기 자산형성 제도를 활용해 은퇴 이후의 재무 설계 지원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치매와 인지기능 저하로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고령자가 늘어나면서, 금융회사의 역할도 단순한 상품 판매를 넘어 자산 보호와 승계, 노후 생활 설계까지 폭넓게 아우르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 NISA 계좌수 추이 (전 금융기관)



■ iDeCo 가입자수 추이 (매년 3월말)



자료: 금융청, 국민연금기금연합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일본 신탁 시장이 성장한 이유

자산을 지키는 금융의 시대가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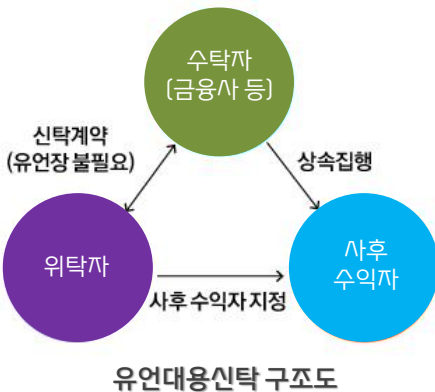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가장 주목받은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신탁(Trust)이었습니다. 일본 신탁 시장의 성장은 단순히 고령화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2004년 신탁업법 개정과 2006년 신탁법 전면 개정을 통해 다양한 신탁 활용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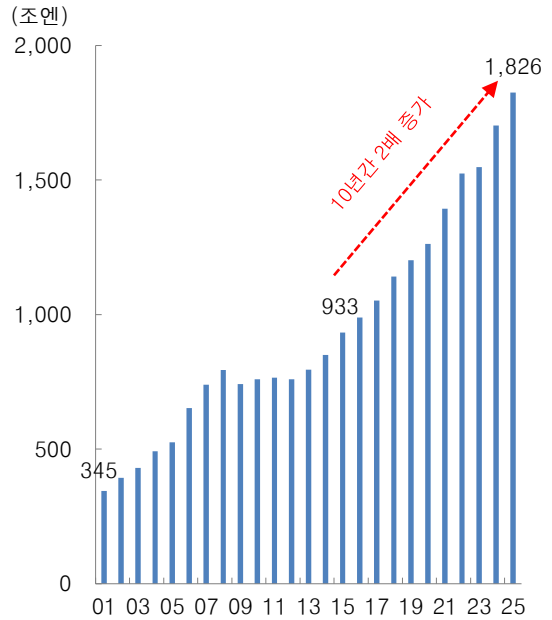
여기에 2010년대 들어 고령화가 가속화 되면서 중산층을 중심으로 관련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치매에 따른 재산관리 문제와 상속·자산승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탁은 노후 자산을 보호하고 이전하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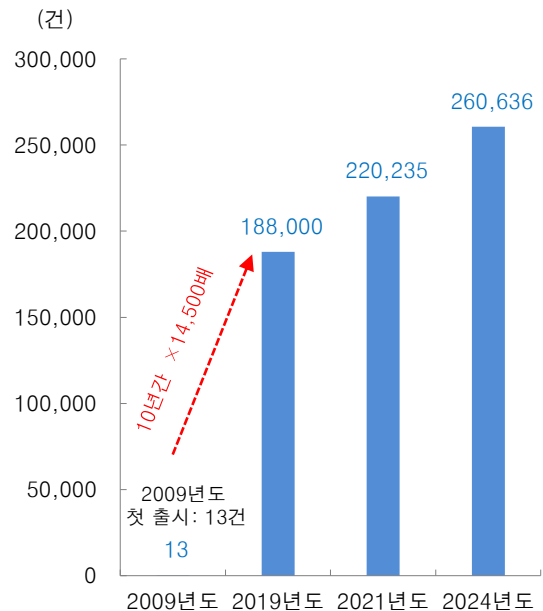
미쓰비시UFJ, 스미토모미쓰이, 미즈호 등 주요 금융그룹도 유연대용신탁, 가족신탁, 치매대비 신탁 등 시니어 특화 서비스를 전략 사업으로 육성하기 시작하면서, 2025년 현재, 일본의 전체 신탁재산 잔고는 고령층 금융자산 유입과 함께 꾸준히 증가해 1,800조엔이 넘는 거대한 시장으로 성장했습니다.



日 신탁재산 잔고 추이 (매년 3월말)



日 유연대용신탁 누적 수탁건수 추이



자료: 일본신탁협회, Google이미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래서 신탁은 무엇을 해결했나?

'치매'와 '상속', 그리고 '자산 동결'의 위험

일본에서 신탁(Trust)이 주목받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른바 '치매 어머니'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고령자가 치매 등으로 판단 능력을 상실하면 금융기관은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예금 인출이나 부동산 처분을 제한하게 됩니다. 자산은 존재하지만 실제로 활용할 수 없는 상태가 발생하는데, 이를 흔히 '자산 동결'이라고 부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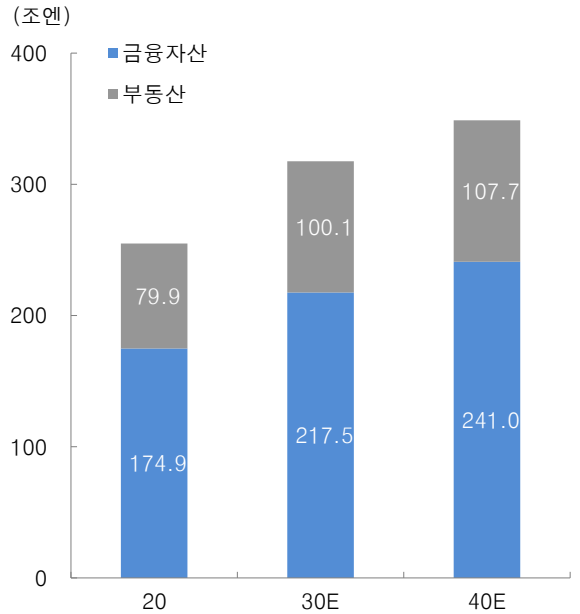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이러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기 시작했고, 특히 2010년대 후반에는 치매로 인해 활용되지 못하는 고령자 금융자산 규모가 수백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관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러한 배경속에서 신탁은 인지 능력이 저하된 이후에도 사전에 정해진 계약에 따라 재산을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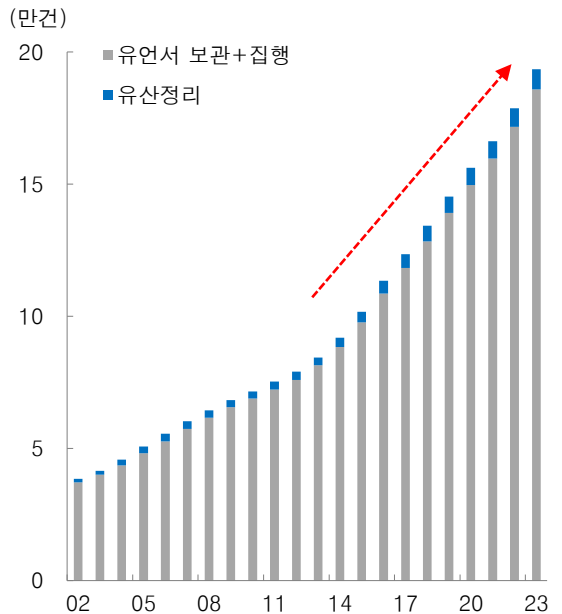
대표적으로 치매대비신탁은 판단 능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가족이나 수탁자가 계약에 따라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유언대용신탁과 자산승계신탁은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줄이고 재산 이전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신탁(Trust)은 치매와 상속이라는 초고령사회의 대표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보호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日 치매 고령자 보유 자산 잔고



日 상속 관련 신탁 계약 건수 추이



자료: 국립사회보장 연구문제연구소, BOJ, 총무성, 신탁협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10년이 지난 현재 성적표

일본은 '하류노인' 을 극복했을까?

하류노인 담론 이후 일본은 노동·복지·금융 분야에서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해 왔지만, 그 성과가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고령자 고용은 확대되었고, 지역포괄케어시스템과 신탁 서비스 역시 초고령사회를 뒷받침하는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치매로 인한 자산 동결과 상속 문제에 대응하는 법적·금융적 장치도 과거보다 한층 정교해졌으며, NISA와 iDeCo 등을 활용해 금융자산을 꾸준히 축적한 사람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노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후 빈곤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제도는 발전했지만 개인의 준비 수준에 따른 격차는 오히려 더 뚜렷해졌습니다.

공적연금 의존도가 높고 금융자산이 부족한 계층,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고령층은 여전히 생활비와 간병비 부담에 취약한 상황입니다. 반대로 충분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온 계층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현재 일본은 '하류노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기 보다, 초고령사회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위험을 제도와 금융을 통해 관리해 나가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해 보입니다.



자료: AI 생성 이미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2026년, 한국은 같은 문제를 더 빠르게 맞이하고 있다

초고령사회와 자산보호 시장의 등장

일본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11년이 걸린 반면, 한국은 이를 단 7년 만에 통과하며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속도의 압축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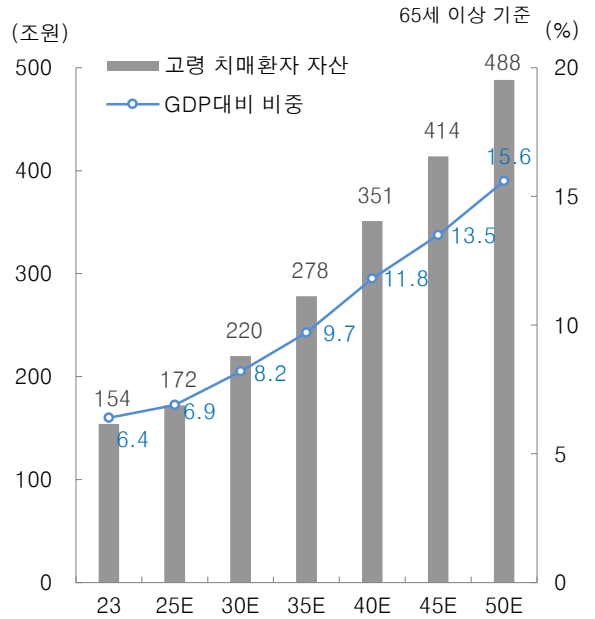
특히 한국 중산층은 가계 자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어, 자산 규모는 크더라도 은퇴 후 소득이 감소하면 생활비와 의료·간병비를 충당할 수 있는 현금 유동성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는 고령층 대상 금융사기 증가와 치매 환자의 재산관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고령자 자산보호에 대한 관심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금융권은 후견지원신탁, 유연대용신탁, 치매 대비 신탁 등 고령자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안심(安心)통장과 같은 공공 기반의 보호 장치도 함께 정비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민간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시장을 키워왔다면, 한국은 공공 후견 제도와 민간 금융서비스가 결합하는 형태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韓 치매 머니 규모 추이



韓 치매 안심 재산 관리 서비스

韓 국민연금 안심(安心)통장

국민연금 수급자를 위한 압류 보호 제도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대 건강금융센터, Google 이미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하류노인(下流老人)에서 깨닫는 투자 아이디어 한 조각

- **노후 리스크가 만든 새로운 금융 수요:** 하류노인 담론이 던진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초고령사회에서는 자산을 얼마나 많이 모았는가보다 얼마나 오래 지킬 수 있는가가 중요해진다는 점입니다. 일본에서는 치매, 상속 분쟁, 장기 간병, 독거노인 증가와 같은 새로운 노후 리스크가 등장하면서 자산 보호와 관리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었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금융산업의 중심은 투자상품 판매에서 자산보호와 생애 전반의 자산관리 서비스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신탁은 초고령사회의 금융 인프라:** 일본에서 신탁은 더 이상 일부 부유층만을 위한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치매로 인한 자산 동결, 상속 갈등, 노후 자산 유실을 예방하는 사회적 인프라로 자리 잡았습니다. 투자자라면 단기 상품 판매보다 신탁·승계·자산관리 역량을 축적하며 장기 수수료 기반 비즈니스를 확대하는 금융기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금융과 돌봄이 결합하는 시대:** 일본의 사례를 보면 고령자의 하류화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 서비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자산관리와 함께 돌봄, 안부 확인, 종활(終活), 생활지원 서비스가 결합되면서 금융회사의 역할도 확대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도 금융과 시니어 케어를 연결하는 종합 플랫폼 모델이 새로운 성장 영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료: AI 생성 이미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위 언급된 종목을 제외한 동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작성자: 나미선)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